4 경제협력 역량 강화



제1절 G20 및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강화외교 **174**

제2절 에너지 · 자원협력 및 녹색성장 · 환경 외교 **181**

제3절 양자 경제외교 **190**

제4절 다자 경제외교 **213**


DIPLOMATIC WHITE PAPER

제 1 절

G20 및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강화외교

1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2013년도 제8차 G20 정상회의가 9월 5일과 6일 양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G20 정상회의가 유로존 위기 대응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금번 회의는 세계경제가 다소 호전되어가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G20 정상들은 이틀간 '세계경제 정책 공조', '역외 조세회피 방지',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 '개발 협력',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G20 국가들의 정책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9개 부속문서를 결과문서로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선진국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시 신중히 조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등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

책 공조를 약속하였고,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를 위한 IMF-RFA 및 RFA 간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재무장관들로 하여금 진전사항을 점검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G20 정상들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마련 · 이행하기로 하고, 특히 역외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보 자동교환으로 세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 방안 모색에 합의하는 등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개도국 개발지원에 대한 2013년 이후의 신규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G20 보호주의 동결' 조치를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안보이슈가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출범하여 글로벌 경제 · 금융이슈를 다루어 온 G20 회의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던 가운데 의장인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리아 이슈가 논의되었고, 결국 미국 주도로 회원국 중 우리를 포함한 12개국 명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가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요 의제 합의 도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먼저 세계경제세션의 선진국 출구 전략 관련 선진국과 신흥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출구전

략 논의로 인해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신흥국 간 합의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G20 보호주의 동결' 조치 연장에 반대하는 일부 신흥국들에게 세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호주의 저지 조치가 지속될 필요성을 설득하여, 2016년까지 연장하는 합의 도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던 고용세션에서는 의장국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선도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접근법으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안하여 의장국을 비롯한 다수 정상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보호주의 동결 조치 및 개도국 개발지원 등 G20 정상의 정책공조 약속에 대해 상시 이행 점검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G20이 충실한 약속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정상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당부하였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계기에 의장인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독일 메르켈 총리, 이탈리아 레타 총리 및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까지 총 8번의 회의를 거쳐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그 지위를 공고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G20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의제 논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 조성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활동

OECD는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회원국 간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이래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동남아 등 신흥 경제국과의 관계 강화, OECD 신규회원국 논의 및 OECD 뇌물방지협약 후속조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OECD에서 우리의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일자리, 평등 및 신뢰(Jobs, Equality and Trust)'라는 주제하에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수석대표로서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개발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OECD 차원의 개도국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역량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OECD가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참여 의사도 표명하였다.

한편, OECD 신규가입국 문제와 관련하여 각료이사회는 콜롬비아와 라트비아

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 및 6개월 이내에 가입심사를 개시키로 하였으며, 코스타리카와 리투아니아에 대해서는 2015년 가입논의 개시를 목표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가입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OECD 관련 논의를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 선진화 추진에 참고해 나가며, 또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로서의 OECD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견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활동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 · 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 · 사회 분야 개발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 · 태지역의 경제 · 사회 개발을 위한 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06년 인천에 개소한 아 · 태정보통신기술센터(APCICT: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에는 ESCAP 산하기구인 동북아지역사무소를 인천에 유치하기도 하였다.

제69차 UNESCAP 총회가 「자연재해와 경제위기에 대한 복원력 증진」을 주제로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62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시형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아 · 태지역 성장 촉진과 위기 방지를 위해 아 · 태지역 무역 자유화와 시장통합 및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ESCAP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아 · 태 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아 · 태 지역 고등교육기관 학습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고, 아울러 아 · 태 지역 재난위험관리 · 기후변화 · 녹색성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프로젝트와 아 · 태 지역 운송발전 행동계획 작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ESCAP 활동을 통해 아 · 태 지역 경제 · 사회 개발을 위해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4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참석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서는 각국의 정 · 관 · 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당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왔다.

2013년 1월 23일부터 26일간 '회복하는 역동성(Resilient Dynamism)'을 주제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인제 대통령 특사는 세계 주요 언론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언론 설명회와 한국의 밤 행사에서 우리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소개하였다. 특히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의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동시에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인제 대통령 특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IMF 총재, WEF 회장,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와 아이슬란드 대통령, 덴마크 총리, 케냐 총리 등 정상급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관심사항과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 2 절

에너지 · 자원협력 및 녹색성장 · 환경 외교

1 에너지 · 자원 외교

1) 에너지안보 외교 적극 추진

2013년에는 정상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한 에너지 · 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이후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6월), 베트남(9월), 인도네시아(10월), 유럽(11월) 순방을 통해 양국 간의 에너지 및 경제 외교를 확대해나갔다. 또한 최초로 방한한 우간다 및 모잠비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막대한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바레인, 카타르, 스리랑카 등 중동 · 서남아 순방을 통

해 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10월 핀란드 방문을 통해 '한 · 핀란드 원자력협력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13년 5월 아태에너지포럼(APEF) 참석과 10월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계기 동북아 에너지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역내 에너지안보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원자력안전 분야 협의를 개최함으로써 에너지안보 및 원자력안전 분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2013년 7월에는 한 · 미 국장급 에너지대화를 신설하고, 2013년 4월 제2차 한 · 일 에너지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또한 강화하였다.

2013년 9월과 12월에는 자원부국 고위급 정책관료 등을 초청하여 '제2차 세일가스국제협력컨퍼런스'와 '제3차 국제에너지협력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부국과의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도넥스(Gadonneix)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의장(4월), 야쏘(Yasso) 이집트 원자력청장(5월), 야마니(Yamani) 사우디 원자력연구원장(6월) 방한 계기 우리 고위급 정부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며, 코코오(Ko Ko Oo) 미얀마 과학기술부 장관 방한(12월)시 산업을 통해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소개 ·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3년 5월 한–이집트 원전기술 관련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원전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3년 10월에는 헝가리 및 핀란드와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12월에는 유망 원전 수출대상국 10여 개국의 외교단을 초청, 제4차 주한외교단 초청 원전세미나 및 에너지산업시찰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원전 협력을 강화하였다.

2) 국제에너지협력 주도

정부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증대하여 국익을 대변하였다. IRENA 총회 및 이사회(1월, 6월, 12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2013-2014년간 IRENA 이사국으로 재선임 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IEA 각료이사회(11월), Pacific Energy Summit(3월), 2013 브루킹스 도하 에너지포럼(4월), 태평양에너지서밋(4월), ASEAN+3/EAS 에너지장관회의(9월), 제127차 OECD/NEA 운영위원회(10월) 등 지역 및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해 우리 에너지협력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3) 에너지외교 인프라 강화 및 민 · 관 에너지 협력체제 강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는 우리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 강화하였다. GECC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 에너지자원 정보를 '일일/특집 국제에너지자원동향', '국제에너지자원입찰정보'로 작성하여 국내 주요 에너지기업 및 유관 기관, 협회 등 에너지 분야 실무자급 2,700여 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13년 말 기준 일일동향 404호, 특집 동향 141호, 입찰정보 129건 제공). 그리고 국내 중소 · 중견 에너지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직접 면담 및 유무선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외국 에너지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

축 및 인적 교류를 지원하였다.

2013년에도 에너지프로젝트중점관리공관과 에너지보좌관 등 재외공관의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주요 자원부국 및 신흥 에너지 시장에 위치한 50개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은 주재국과의 에너지 · 자원 행사 공동 개최, 현지 에너지자원 동향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 자원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에너지협력외교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회의',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구축 관련 정책협의회', '비전통 에너지자원개발동향 정책협의회'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에너지 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민 · 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다.

2 녹색성장 · 지속가능발전 외교

지속가능발전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발전의 개념으로 확인되고 확산되었다.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결집하기 위해 201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가 개최되어 지속가능발전의 3대축인 경제 · 사회 ·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재차 강조되었으며, 참가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출을 위한 국가 간 프로세스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목표 설정을 위한 공개작업반, 지속가능발전 재원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전문가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2013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이 출범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글로벌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입장이 최종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현재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18개국에서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GGGI는 2013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산하 통계작업반 회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적격기구 지위를 획득하여, GGGI에 대한 각국의 기여금이 ODA로 산정되게 되었다. GGGI는 2013년 12월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 개최를 통해 녹색성장에 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왔다. 2013년 6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3차 GGGS 회의에는 가이아나 전 대통령, 덴마크 개발협력 장관, GGGI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의 미래: 재원, 혁신, 정책'이라는 주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덴마크 등 주요 녹색성장 파트너와의 양자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는 2011년 최초의 가치동맹인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을 출범시키고 매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3년 10월 제3차 녹색성장동맹회의

가 '친환경선박 및 해양 플랜트 협력'을 주제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3년 유엔이 정한 국제 물 협력의 해를 맞아 개최된 다양한 물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차 아 · 태 물 정상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참가국들과 물 관련 이슈에 슬기롭게 대처해 온 우리나라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환경부 및 유관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아시아(스리랑카, 태국) 및 중동(쿠웨이트, 카타르)지역에 민 · 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당국과의 환경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가 보유한 물 · 환경 기술을 소개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 · 아프리카 물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물 산업의 아프리카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3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우리나라는 11월 11-23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를 비롯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장관급 회의(Pre-COP), 주요경제국포럼(MEF), 피터스버그 기후변화 대화 등 주요 공식 및 비공식 기후변화 협상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선 ·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 진전에 건설적 기여를 하였다.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는 선 ·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체제로, 신 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은 2012년에 개시되어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2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였으며, 2013년 6월 10일 GCF 사무국의 설치 및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 GCF 본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2월 4일 GCF 사무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GCF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경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주요한 재정메커니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환경협력 강화

1)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성장, 국가들 간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 · 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양국의 환경정책 및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동북

아환경협력, 대기 및 해양오염문제, 기후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대책, 생물다양성,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이 참여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을 통해 황사, 대기 및 해양오염, 생태계 보전 등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해 매년 논의해오고 있다. 2013년 11월 5-6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18차 회의에서는 동북아지역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새로이 채택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양보전구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의제별 구체적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 · 중 · 일 · 러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정부 간 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존, 유류오염 방제, 해양쓰레기 저감 등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해양 분야, 유해폐기물 및 화학 물질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그 대응을 위해 160여 개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UN,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르(Ramsar)협약,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사전 승인 통보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의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제 3 절

양자 경제외교

1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관계

1) 한 · 중 경제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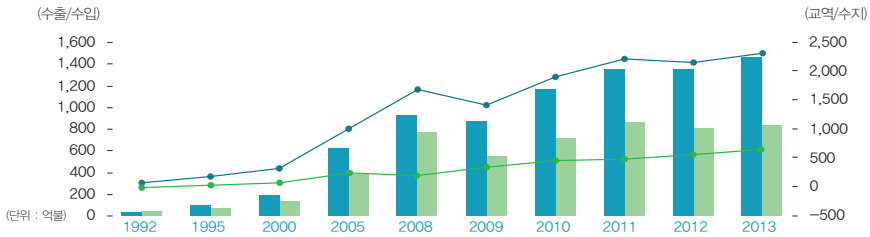
한 · 중 경제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2002년부터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이며,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및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한 · 중 간 교역규모는 양국 수교 이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액은 2011년 2,206억 달러로 증가하여 수교 20년 만에 교역규모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3년 양국 교역액도 2,289억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1]. 한 · 중

1) 2013년 기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이며, 중국에 있어 한국은 홍콩 제외 시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1위로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3,0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한 · 중 간 교역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교역 동향



	1992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27	91	185	619	914	867	1,168	1,342	1,343	1,458
수입	37	74	128	386	769	542	716	864	808	830
교역	64	165	313	1,005	1,683	1,409	1,884	2,206	2,151	2,289
수지	−11	17	57	233	145	325	453	478	536	628

출처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대중국 누적 투자액은 1968-2013년 48,526건, 616억 달러에 이르며, 2013년 대중국 투자액은 48억 달러이다. 한편, 1962-2013년 중국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49억 달러이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진출 촉진(走出去) 정책과 우리나라의 중국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으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 · 중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FTA 협상을 2012년 5월 2일 개시하였고, 우리 측은 상품분야 대중수출 확대 및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협상을 8차(2013.11.18-22, 인천)까지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 시에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한 대내 경제개혁 심화를 적극 표방하고 있어,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 추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한 · 중 간 투자 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한투자	1	12	1	0	3	2	4	7	7	3
대중투자	29	38	37	45	49	27	44	48	65	48
대한투자(누계)	5	17	18	18	25	27	31	37	45	49
대중투자(누계)	144	181	218	263	383	410	454	502	567	61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 · 중 양국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 · 중 미래비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양국 간 정보통신 · 과학기술 · 에너지 · 환경 · 금융 · 지재권 · 보건의료 · 농촌개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 경제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통상 마찰도 발생하고 있으나, 양국은 정상회담은 물론 장관급 협의채널과 차관급 경제공동위원회, 품질감독검사검역협의체 및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등 다양한 양자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통상 현안을 원만히 관리,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3년에는 제19차 한 · 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2013.9.27, 베이징)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 시 경제분야 성과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도시개발 및 금융 등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제19차 한 · 중 경제공동위를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경제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향후 한 · 중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확대 및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중국 중서부, 동북부 지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 · 동북3성(요녕성 · 길림성 · 흑룡강성) 경제협력포럼, 한 · 서북3성(섬서성 · 감숙성 · 영하회족자치구), 한 · 섬서성 경제협력 포럼 및 한 · 중 우호주간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교역 · 투자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 뿐 아니라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한 · 일 경제외교

한 · 일 경제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들어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양국 교역액은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교역 1,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2013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9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일본 정부의 경기침체 탈피를 위한 아베노믹스 정책[2]추진으로 인해 엔화 약세 현상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엔화 약세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일본경제의 회복세로 인한 세계 경기 개선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요인이 동시에 공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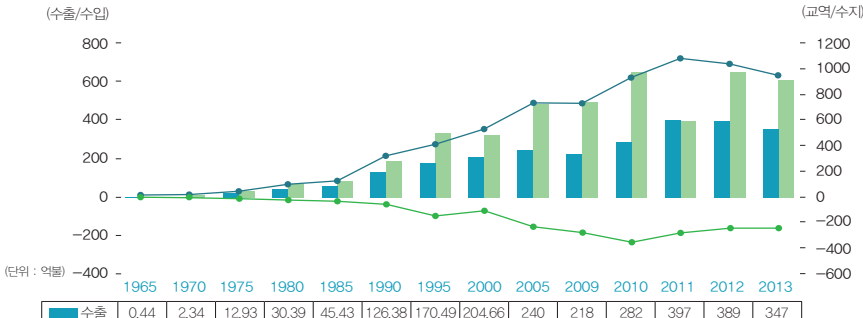
2013년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 추진과 맞물려 대일수출은 346.9억 불로 전년대비 10.6% 감소하였고 전체 교역규모 또한 947.1억 불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다. 현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3위 교역상대국이고(EU 제외 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3]

우리나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 번도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3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일본 내 주요 부품 · 소재 공급 체계의 교란 및 지속적인 엔고 현상 등에 힘입어 무역적자 규모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2013년 25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일본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며 인프라를 조성하는 동시에, 무역적자 비중이 큰 부품 · 소재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 · 일 부품 · 소재 조달공급 전시 · 상담회」는 양국 부품 · 소재 산업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3년에는 국내업체 160개사, 일본업체 40개사가 참여하는 제5회 한일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10월 1-2일, 서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FEZ 등 4개 지역을 지정한 부품 · 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아베노믹스는 '12.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이다. ①과감한 금융완화, ②신축적 재정정책,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전략 등 3대 전략으로 일본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2013년 기준, 일본은 우리의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2위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상대국이며, 일본에 있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7위로 전체 교역규모 상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1965년 한일수교 이후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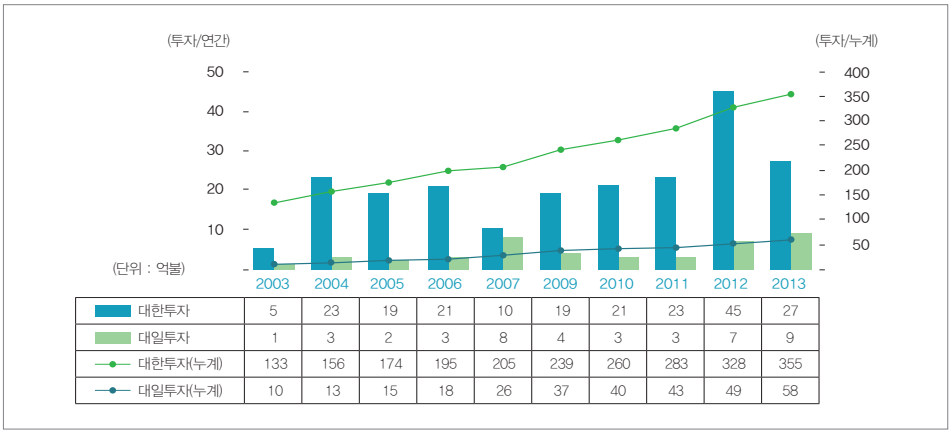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0.44	2.34	12.93	30.39	45.43	126.38	170.49	204.66	240	218	282	397	389	347
수입	1.67	8.09	24.34	58.58	75.6	185.74	326.06	318.28	484	494	643	386	644	600
교역	2.11	10.43	37.27	88.97	121.03	312.12	396.55	522.94	724	712	925	1080	1032	947
수지	−1.23	−5.75	−11.41	−28.19	−30.17	−59.36	−155.6	−113.6	−244	−276	−367	−286	−255	−253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편,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 외국인 투자국으로서, 1962-2013년 일본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355억 달러로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16.1%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07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에는 우리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과 맞물려 ①거래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개발 용이, ②외환리스크 회피, ③생산비용절감(낮은 실효세율, 전력요금 등), ④FTA를 활용한 수출거점 등이 일본기업의 투자메리트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도에는 전년의 급증에 대한 반동과 초엔고의 시정, 일본의 TPP 참가, 한국의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투자메리트가 감소하여 평년수준인 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10년간 한 · 일 간 투자 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한투자	5	23	19	21	10	19	21	23	45	27
대일투자	1	3	2	3	8	4	3	3	7	9
대한투자(누계)	133	156	174	195	205	239	260	283	328	355
대일투자(누계)	10	13	15	18	26	37	40	43	49	5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 · 일 양국은 경제 · 통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장관회담, 고위경제협의회 등 양자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은 2013년 차관보급 고위경제협의회(11.11, 동경)를 개최하여 향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는 한편, 양국 기업들의 제3국 공동진출,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의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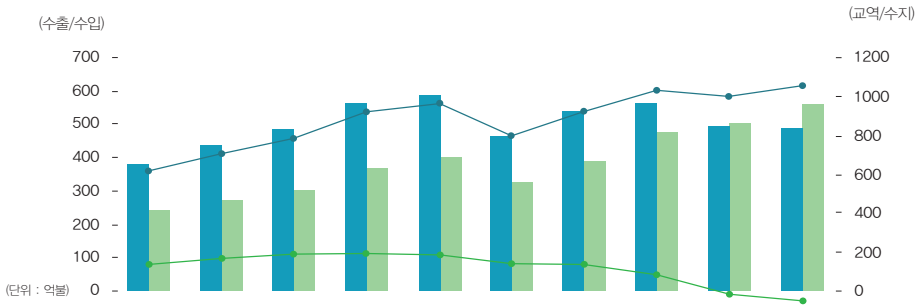
3) 한 · EU 경제외교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우리는 EU의 제8위 교역

상대국으로, 한 · EU간 교역액은 1,051억 불에 이른다.

EU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 · EU 교역은 2009년 이후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총 교역액은 2012년에 비해 53억 불 증가하였다. 2013년 한 · EU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051억 불이며, 이는 우리나라 총 교역의 9.8%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489억 불로 전체 수출의 8.7%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승용차, 선박,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한편, 대EU 수입액은 562억 불로 전체 수입의 약 10.9%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품목은 승용차, 나프타, 원동기, 원유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한 · EU 간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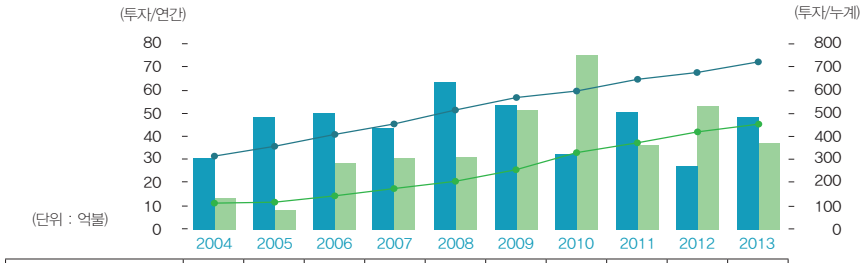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378	437	485	560	584	466	535	557	494	489
수입	242	273	301	368	400	322	387	474	504	562
교역	620	710	786	928	984	788	922	1031	997	1051
수지	136	164	184	192	184	144	148	83	−10	−74

출처 한국무역협회

또한 EU는 우리나라의 최대 외국인 투자주체로서, 1962-2013년간 EU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722억 불이며, 2013년 대한국 투자액은 2012년에 비해 76.9% 증가한 48억 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1968-2013년간 우리나라의 대EU 누적 투자액은 458억 불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 · EU 간 투자 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한투자	30	48	50	43	63	53	32	50	27	48
대EU투자	13	8	28	30	31	51	75	36	53	37
대한투자(누계)	308	356	406	449	512	565	597	647	674	722
대EU투자(누계)	109	116	144	174	205	257	331	368	421	45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1996년에 체결된 한 · 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한국과 EU는 2001년부터 매년 양자 경제 · 통상 정책 및 현안 등을 협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서울과 브뤼셀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제11차 한 · EU 공동위는 2013년 9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측은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한 · EU 경제현황 및 FTA 이행 2주년을 평가하는 한편, 중소기업, 과학 · 기술, 해양수산, 항공, 교육, 문화, 기후

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공동위원회 등의 정례 협의체 및 수시 협의를 통해 한 · EU간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 · EU간 경제현안을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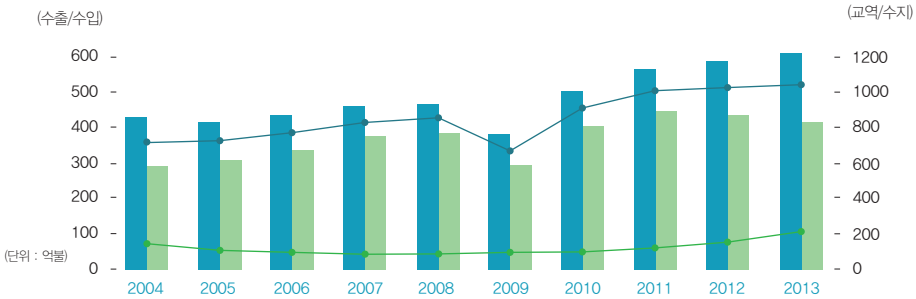
4) 한 · 미 경제외교

현재 미국은 중국 · EU에 이어 우리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며, 우리는 미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이다. 특히 2012년 3월 15일 한 · 미 FTA 발효는 양국 간 교역관계가 보다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 한 · 미 교역규모는 1,036억 불로 전년(1,019억 불) 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2013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621억 불로 전체 수출의 11.1%를 차지하였으며 수출품목 중 자동차 · 무선통신기기 · 자동차부품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대미 수입액은 약 415억 불로 전체 수입의 약 8%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 항공기 및 부품 ·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곡물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1968-2013년간 우리나라의 대미국 누적 투자액은 약 698억 불로 우리나라 해외 투자 총액(3,635억 불)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EU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제1위 외국인 투자국으로서 1962-2013년 미국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533억 불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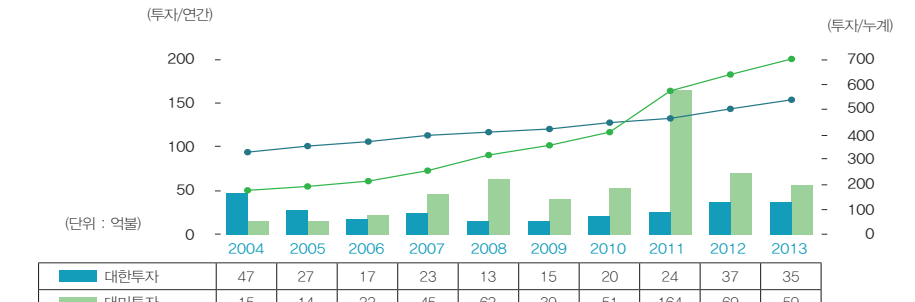
2004년 이후 한 · 미 간 교역 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429	413	432	458	464	377	498	562	585	621
수입	288	306	337	372	384	290	404	446	433	415
교역	716	719	768	830	847	667	902	1008	1019	1036
수지	141	108	95	86	80	86	94	116	152	205

출처 한국무역협회

최근 10년간 한 · 미 간 투자 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한투자	47	27	17	23	13	15	20	24	37	35
대미투자	15	14	22	45	62	39	51	164	69	59
대한투자(누계)	323	350	367	390	403	418	438	462	498	533
대미투자(누계)	175	190	212	256	319	358	409	573	644	70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 · 미 교역 및 투자는 절대액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급속한 교역확대 및 미국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대미 교역 비중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보유한 우리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 · 미 FTA를 통해 두 나라는 이미 굳건한 경제 · 통상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입규제조치 대응

외교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2000년 9월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우리 기업에 대해 부당한 조사절차나 조치가 있을 경우, 외국 규제 당국과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담은 정부 입장서를 해당국 정부에 제출해 왔으며, 필요시 수입규제 대책반을 파견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한 해 동안만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2건으로 전년(26건)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2013년 12월 말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누적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총 142건이며, 이 중 반덤핑 조치가 112건, 상계관세 조치가 4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26건이었다.

이러한 수입규제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은 2012년부터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무역과 관련된 제도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이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책메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조치철회 등 15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성과 사례로 ▲멕시코의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없는 조사 종료 ▲러시아의 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없는 조사 종료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철강제품(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하향 판정 ▲인도의 화학제품(무수프탈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브라질 화학제품(액상에폭시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단 등이 있다.

특히, 멕시코의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한 · 멕 정상회담(10.7), 멕시코 경제부 장관 면담(3.26) 등 각종 고위급 양자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멕시코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가격약속을 수용하여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조사를 종료함으로써 연간 1.8억 불(1,963억 원) 정도의 관세를 절감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러시아의 직물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2011년 10월 조사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 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양자 협의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 결과, 2013년 9

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함에 따라 조사가 종료되고, 연간 1,200만 불(134억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약 2.8억 불(약 3,0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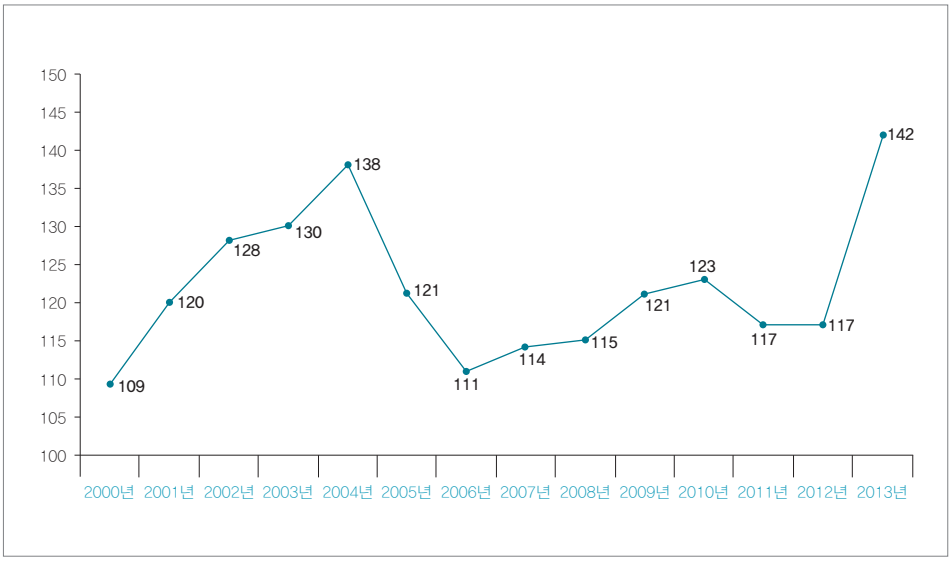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활동

ㅇ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규제 조사개시 이전, 조사 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측 대응논리를 개발

ㅇ 수입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협의
-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 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ㅇ 서한 및 정부 입장서 전달
-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

연도별 수입규제 건 수 추이



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총 142건(조사 중 35건 포함)

(2013.12.31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1. 인도	24(5)	0	0	4(2)	28(7)
2. 중국	17(1)	0	0	0	17(1)
3. 미국	10(2)	0	4(1)	0	14(3)
4. 터키	3	0	0	7(1)	10(1)
5. 브라질	9(4)	0	0	0	9(4)
6. 인도네시아	6(3)	0	0	3(1)	9(4)
7. 호주	8(4)	0	0	1(1)	9(5)

8. 파키스탄	8(1)	0	0	0	8(1)
9. 캐나다	6(1)	0	0	0	6(1)
10. 태국	4	0	0	1	5
11. 러시아*	1	0	0	3(1)	4(1)
12. 우크라이나	1	0	0	3(1)	4(1)
13. EU**	3	0	0	0	3
14. 말레이시아	3	0	0	0	3
15. 아르헨티나	3(1)	0	0	0	3(1)
16. 남아공	3(1)	0	0	0	3(1)
17. 필리핀	0	0	0	3(2)	3(2)
18. 대만	1(1)	0	0	1(1)	2(2)
19. 멕시코	1	0	0	0	1
20. 콜롬비아	1	0	0	0	1
합계	**112(24)**	**0**	**4(1)**	**26(10)**	**142(35)**

※ ( )안은 현재 조사 중인 건수
* 3국 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수입규제조치 포함
** 우회덤핑 2건 포함

2013년 수입규제 대응 실적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 USD)	감축된 관세율	연간 포기된 관세액[4] (천 USD)	비고
1	냉연강판 (멕시코)	300,299	60.4%	181,381	가격약속 협상으로 조사 종료
2	백판지 (호주)	124,173	31.7%	39,363	반덤핑 조치 철회 요청 검토 결과, 더 이상 조치 유지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조치 종료

4) 각 상품 연간 수출액에 변경 전 · 후 관세율 차이를 곱한 액수로서 실제 액수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납부하지 않게 된 비용을 의미

3	선재 (말레이시아)	64,433	기타 기업으로 분류 시 25.20%	16,237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탄소성분 0.6% 이상의 고탄소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에서 제외
4	석도강판 (인도네시아)	53,895	기타 기업으로 분류 시 예비판정:33.82% 최종판정:7.9%	13,970	예비판정 시보다 큰 폭(25.92%p) 으로 반덤핑 관세율 인하
5	직물 (러시아)	24,753	50%	12,377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조사 종료
6	동관 (캐나다)	27,534	기타 기업으로 분류 시 예비판정:109.8% 최종판정:82.4%	7,544	예비판정 시보다 큰 폭(27.4%p)으로 반덤핑 관세율 인하
7	석도강판 (말레이시아)	16,874	기타 기업으로 분류 시 예비판정:25% 최종판정:9.78%	2,568	예비판정 시보다 큰 폭(15.22%p)으로 반덤핑 관세율 인하
8	무수프탈산 (인도)	24,693	10%	2,469	업계 및 정부 대응으로 인도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9	PVC 경질 필름 (콜롬비아)	1,765	111.18%	1,962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PVC 열수축 경화 필름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
10	액상에폭시수지 (브라질)	6,012	31.9%	1,918	조사 종료
11	PET 제품 (아르헨티나)	22,045	8%	1,764	주요 수출기업 2개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 결정
12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브라질)	22,250	4.89%	1,088	예비판정 시 4.89% 덤핑마진율이 산정 되었으나, 업계 및 정부의 대응으로 업계 가 제출한 자료가 인정되어 최종판정시 무혐의 결과 도출 가능
13	다이어리 (뉴질랜드)	462	기타 기업으로 분류 시 85%	393	국내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조사 종료
14	아크릴 시트 (브라질)	261	제소자 주장마진 73.1%	191	조사개시를 위한 최종 검토 시 조사 대상 국가에서 제외
15	체인(터키)	223(60톤)	1,200$/톤	72	주요 수출기업 2개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 결정
	총계			**283,297**	

3 경제협력진흥외교

1) 세일즈 외교

외교부는 정부의 역할이 큰 중진국, 신흥국 대상으로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지역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해외 수주 정보 제공, 입찰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를 대한민국 투자설명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정상순방 행사 시 유망 투자자 참석 행사를 개최하여 해외투자유치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보건의료, 방산수출 등 특정 분야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복지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의 의료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 정보, 투자 진출 정보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우리 기업에 전파 중이다. 또한 동남아 · 중남미 지역 등에 대한 방산 장비 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중 34억 불의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방산 수출 관련 국내외 다층적 협업체계 강화, 방산협력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역시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의 노동 관련 법규 ·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외 취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하여 취

업박람회 개최, K-move 멘토 구성 등을 통해 취업 ·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워킹홀리데이 협정 시행, 협정 국가 확대를 통해 해외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을 통한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2)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외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상시적으로 실행하여 시장개척 활동 지원, 각종 시장정보 제공,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현지 법률 자문,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각 재외공관에 주재기업과의 협의체인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 · 운영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기업담당관'을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경제협력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 등에 파견하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수입업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10여 회 이상의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 중이다. 2013년에는 19개국에 11회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장 상담액 및 계약액 1.8억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외교부는 2008년부터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및 총영사회의 계기에 공관

장과 기업인 간의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대사 및 총영사가 직접 기업인들과 1:1 상담을 실시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기업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요청으로 연례행사로 정착하였으며, 상담건수와 참여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경제인과의 만남" 개최 현황

연도	재외공관장 회의	주관 경제단체	일자	참여 공관 수	참여 기업 수	상담 건수
2013	공관장회의	대한상공회의소	5.24	107	162	507
	총영사회의		7.9	39	74	123





재외공관장과 기업인 1:1 상담회(2013.5.24)

2011년부터는 재외공관 주도로 현지 진출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책사업 수주,

방산물자 수출지원,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결 등을 내용으로 53개 공관에서 54개 사업을 시행, 현지 진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외교부는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공관이 주도하여 현지 한국상공회의소(KOCHAM: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 해외 한국기업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브라질대사관 주도로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가 2012년 11월 설립되어 2013년 9월 법인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동 상공회의소가 안정되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다.

해외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재외공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CSR 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주재국 정부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CSR 활동 내용을 홍보하며, 주재국 정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이 CSR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3년에는 25개 공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국제기구 및 CSR 선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 사업을 더욱 발전 ·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2회 CSR 국제포럼(2013.12.5)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2008년부터 6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대상 재외공관 수가 25개로 확대되었다. 우리 공관은 현지 법률회사 또는 법률자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재국의 회사설립, 청산절차, 노동 관련 법규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령 문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과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시장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농림부와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세계 각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에서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UN 조달시장 설명회(2013.10.22)

또한, 외교부는 2007년부터 'UN 조달시장 설명회'를 대한상공회의소 · KOTRA와 민관합동으로 13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유엔조달관이 유엔 조달시장 현황, 벤더 등록절차 등을 설명하고, 유엔조달관과 희망 기업 간 1:1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UN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해외시장 정보 제공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입수한 각국의 경제동향, 박람회 및 입찰정보 등을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최근 시장 정보란을 개설(2013.10)하여 게시 · 제공하고 있다.

2013년 메일링 현황

(총64개 기관, 2013.12.31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입찰정보	79	44	43	47	27	26	24	19	23	33	21	39	425
행사정보 (박람회 등)	3	8	4	2	4	5	9	8	7	6	4	1	61
경제동향	29	–	–	–	–	–	1	7	9	12	7	14	79
합계	**111**	**52**	**47**	**49**	**31**	**31**	**34**	**34**	**39**	**51**	**32**	**54**	**565**

또한, 2001년 12월부터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 란을 개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주재국 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1:1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67개 공관에서 2,720개의 기업 문의에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통상환경을 분석 · 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하였으며, 2013년 판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명의로 발간하여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5] 또한, 외교부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이후 「통상 마찰 ·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2010년까지 매년 발간하였으며, 2013년에는 기업들의 현지 진출 · 정착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사례들을 포함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5) 2013년 판 「외국의 통상환경」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한 '무역장벽보고서'(1권),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 상계관세 및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등 15개 분야별로 각국의 통상장벽 관련 정보를 분석, 정리한 총론적인 성격의 '분야별 통상환경'(1권)과 아시아 · 대양주, 아메리카, 아프리카 · 중동, 유럽 등 4개 지역의 국가(총 83개국)별로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무역 · 투자 관계, 각종 통상장벽 현황 등을 분석, 정리한 각론적 성격의 '지역별 통상환경'(4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절

다자 경제외교

1 발리 APEC 정상회의 참석

제21차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013년 10월 7-8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하에,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 APEC의 연계성 비전,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고, 이와 함께 "태평양 도서국과의 대화", "CEO Summit",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가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26개 항의 정상선언문과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제9차 WTO 각료회의 지지 별도 선언문" 및 2개의 부속서를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채택하였다.

금번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성과는 APEC 정상들이 지속적인 무역 · 투자 자유화

를 통해 아태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기로 한 약속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기존의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2013년 12월에 개최되는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별도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박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 세션의 선도발언을 통해 DDA 협상의 지연으로 인해 손상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APEC 정상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하여 다수 정상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두 번째 성과는 APEC 정상들이 아태지역의 연계성 증진에 관한 비전을 담은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고, 연계성 증진과 인프라 확충에 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APEC은 앞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물리적인 연계성을 높이고, 국가 간 규제를 조화시켜 제도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며, 여행객, 학생, 연구자 등의 인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가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기 의장국인 중국이 2014년에도 연계성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개년 계획"의 채택을 지지하면서,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역량을 배양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민간, 다자개발은행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성과는 APEC 정상들이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부족, 에너지 자원 고갈, 물 부족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의 달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식량안보 로드맵 수립, 해양 이슈의 주 의제화, 과학기술 협력 강화, 여성의 경제 참여율 제고, 에너지 안보 제고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식량, 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태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APEC 내 선진 · 개도국이 함께 적정기술 협력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태평양 도서국과의 대화에서도 해수면 상승 등은 태평양 도서국에게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APEC 기후센터 등을 통한 아태지역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 외에도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Summit"에서 정상들은 세계 경제 동향, 역내 지역통합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CEO Summit의 '혁신' 관련 세션에서 창조경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아태지역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여 아태지역 주요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3년 APEC 정상회의는 다양한 지역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지속적인 무역 · 투자 자유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려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태지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PEC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58%, 교역량 49%, 인구

39%)과 우리나라와 여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 비중(수출의 72%, 수입의 59%) 등을 감안할 때, APEC은 역내 경제 성장과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큰 협력체이므로 앞으로도 APEC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수출 시장과 외교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경제 각 분야 협력외교 기반 구축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구현을 위한 주요국과의 창조경제 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영구옵서버 지위획득을 계기로 북극 활동을 활성화해왔다. 또한 투자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왔다.

1) 창조경제 구현 지원

2013년 중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27개국과의 정상회의 계기에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포럼 신설,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합의 및 연구자 교류약정 체결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2013년 6월 과학기술 혁신 실적이 우수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전망이 밝은 국가에 주재하는 34개 우리 공관을 과학기술 거점공관으로 지정하여 우리 벤처기업 해외진출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왔다. 또한 외교부는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제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 및 창조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와 창조경제 포럼을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및 다보스 포럼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여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창조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해오고 있다.

또한 우리 과학기술 거점공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주요 선진국들의 창조경제 모범사례를 온라인 인큐베이터인 '창조경제타운'에 게재하여 창업을 꿈꾸는 국내 기업의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 북극권과의 국제협력 강화

최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해빙(解氷)으로 북극항로 개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권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태리 등 국가들과 함께 영구 옵서버로 가입하였다.

이러한 영구 옵서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우리는 북극권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및 경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북극권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Senior Arctic Officials Meeting)와 산하 작업반 회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지위 획득 이래 처음으로 2013년 10월

캐나다 화이트호스(White Horse)에서 개최된 고위관리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북극이사회 및 옵서버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회의와 함께 북극 관련 국제포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3년 5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노르웨이 스발바르(Svalbard) 니알슨(Ny-Alesund)에서 개최된 니알슨 북극국제심포지움(Ny-Alesund Symposium)에 참석하여 우리의 북극 과학 조사연구 참여 등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과 기여 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13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Reykjavik)에서 개최된 '북극써클(Arctic Circle)' 회의에 참가하여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 활동 계획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 등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극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개발기회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3) 투자보장, 사회보장 등 경제관련 협정 체결 및 개정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예: 수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 및 기업을 보호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3년에는 한 · 르완다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었고, 한 · 케냐 투자보장협정, 한 · 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가나, 파푸아뉴기니, 투르크메

니스탄 등 5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협의 중이다.

한편,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3년에는 한 · 중국 사회보장협정과 한 · 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스웨덴 및 스위스와 사회보장협정을 타결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 시 이중과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중에는 타지키스탄, 폴란드(개정) 등 2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고, 홍콩, 케냐와 협정 문안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와의 항공협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이들 국가와 인적 · 물적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항공업계의 운영 효율 증진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도모하여 왔다. 2013년에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태국, 터키, 폴란드, 영국 등과 항공협정을 개정하였으며, 타지키스탄, 조지아 등 신흥국가들과 신규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